

“판매자도 당한다” 서민 울리는 중고거래 사기 ‘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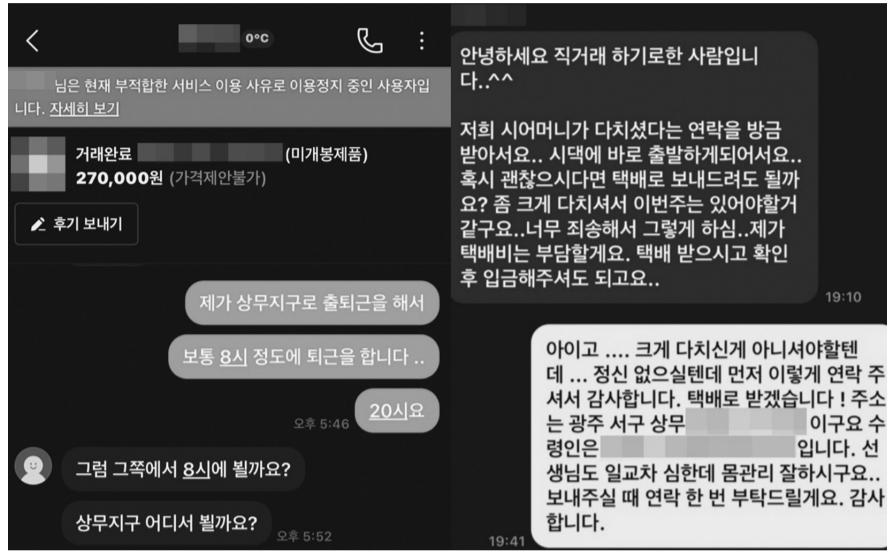
광주·전남 하루 직거래사기 12건 대표통장·조직사기 등 수법 대담 “거래자 계좌·전화번호 등 확인”

“정가보다 훨씬 싸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동시에 접근해 돈만 빼가고 잠적하는 3자 사기더라고요.”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25)씨는 최근 중고·직거래 앱으로 무선이어폰을 구매하려다가 사기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주머니 사정이 여의찮아 중고·직거래 앱을 이용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는 한다”며 “최근 중고 거래 중 상대가 갑자기 가족이 아프다며 비대면 택배 거래를 요청하더라. 안타까운 마음에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돈만 편취하는 3자 사기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변에 사는 이웃과 중고·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전 세대를 걸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온라인 중고·직거래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날이 갈수록 사기범들의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아 시민들의



비대면·택배 거래를 유도해 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돈만 편취하고 사라지는 3자 사기 유형. 독자 제공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의 직거래 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2235건 △2022년 2344건 △2023년 2105건이며 전남의 경우 △2021년 2722건 △2022년 2599건 △2023년 2293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하루 평균 약 12건의 직거래 사기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달 19일 광주 광산경찰은 다수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 게임기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113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잠적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으며 유사 범죄 경력만 2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30대 B씨가 또다시 중고 거래 사기를 저질러 서부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고 거래 앱에 데

블릿PC, SD카드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190만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마땅한 수입이 없던 B씨는 대금이 계좌로 이체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고·직거래 사기 피해로 지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피해자 구제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등을 가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계좌지급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접수 즉시 계좌지급정지가 가능한 각종 피싱사기와는 달리 중고·직거래 사기 피해 시 계좌정지까지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는 사기범 검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사기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렵다.

경찰은 중고·직거래 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표통장과 허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개설하거나

조직을 이뤄 대규모 사기 범죄를 벌이는 등 사기범들의 범죄 수법이 담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온·오프라인서 중고·직거래 사기 예방 홍보와 동시에 시민 피해 접수 시 계좌·전화번호·사이트 등을 집중 추적·수사해 신속 검거하는 등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고·직거래 사기에 대비해 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은 “중고·직거래 사기의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남들보다 빠르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질 범죄다”며 “가능한 비대면 거래는 피하고 금융사기방지서비스 등을 이용해 거래자의 계좌번호·전화번호 등을 사전 조회하는 등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직거래 사기는 피싱범죄와 달리 즉시 계좌동결이 되지 않아 수일 안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기범들의 범죄 양상이 다각화·조직화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중고·직거래 사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시교육청, 5·18 관련 단체, 학생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5·18 홍보단체 ‘푸른새’ 발대식이 진행됐다.

광주교육청 제공

5·18 청소년 홍보단 ‘푸른새’ 출범식 개최

오월정신 콘텐츠 제작 등

5·18민주화운동 역사애곡을 막기 위해 광주 청소년들이 나선다.

광주교육청은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이정은 시교육감, 박미경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김호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장, 학생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5·18홍보단 ‘푸른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푸른새는 121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5·18 홍보단체다. ‘5월’의 순우리말인 ‘푸른달’과 ‘자유롭게 날아가 소식을 전하는 새’를 합쳐 5·18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평화로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단체명을 정했다.

이날 행사는 동요 메들리와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광주 5·18청소년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임명장 수여와 활동선서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의 5·18 바로 알고 실천하기 특강 △(주)사인발리지 김주영 대표의 푸른새 활동 SNS 홍보하기 특강 △활동 계획 안내 △5·18 사적지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푸른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5·18 왜곡 방지 및 5·18 정신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5·18홍보미션을 수행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찾아오는 5·18 세계화 프로그램 교류활동(대만 2·28 사건과 5·18민주화운동) △평화의 섬, 제주 민주인권탐방(제주 4·3과 5·18민주화운동) 등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활동을 이수한 단원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푸른새 활동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단원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표창할 계획이다.

푸른새 단원인 김지만 광주효광중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5·18에 대해 배우며, 궁금한 부분은 책과 영상을 찾아 보고 있다”며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활용해 5·18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은 시교육감은 “오월정신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세계로 확산해야 하는 숭고한 인류의 자산이다”며 “대만 2·28, 제주 4·3 등 다른 지역, 국가와 역사 교류를 통해 5·18정신을 계승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강주비 기자

400년 전, 강항 선생이 쓴 편액 고향으로 돌아왔다

영광 내산서원 ‘중오소호’ 기증식

400여 년 전, 수은(睡隱) 강항(姜尙) 선생이 쓴 편액 ‘중오소호’(從吾所好)가 17일 선생의 고향인 영광으로 돌아왔다.

이날 영광 내산서원에서 열린 기증식에는 일본의 강항 연구가 무라카미 쓰네오 씨에게 편액을 기증받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사토 신지로 수은강항선생 일본연구회장, 김동진 강항선생기념사업회장(광주대 총장), 강재원 내산서원보존회장 등이 참석해 400여 년 전, 선생이 남긴 뜻을 기렸다.

광주향교와 영광향교, 이흥서원 등 지역 유림과 영광지역 초·중·고생도 참석했다.

길이 1m50cm, 너비 55cm로 무게가 27kg에 이르는 편액은 1995년부터 무라카미 씨가 보관해 오다 지난 5월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증했고 6월 인천세관을 통해 돌아왔다.

강항 선생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일본에 끌려가 오즈와 교토에 억류돼 살면서 유학을 전수하다가 1600년 귀국



17일 영광 내산서원에서 열린 수은 강항 선생 편액 기증식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6월 인천세관을 통해 30여 년만에 국내에 들어온 편액을 들어보이고 있다.

강항선생기념사업회 제공

한 뒤, 고향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1618년 별세했다. 편액의 ‘중오소호’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며 ‘부(富)가 추구할 만하다면 비록 말채찍을 잡는 사내가 되더라도 나 또한 그렇게 하겠다, 만약 추구할 만하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전 총리는 “수은 선생이 쓴 공자의 말씀 속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 담겨있다”며 “돌아온 편액이 국내의 강항 선생 연구에 기여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전남경찰, 도내 전역 음주운전 단속 일제 실시

전남경찰,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음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전역 경찰서 동시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17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중대범죄인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8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된다.

전남의 음주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감소세에 있으나, 매년 500건 이상 음주 교

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음주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하다.

경찰은 통계분석 결과 음주 사망사고가 7월(12.09%)에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흥가·주점, 일반대중식당 밀집지역, 관광지·골프장 진·출입로 등 각 경

찰서별 음주운전 우려지역에 교통경찰 이외에도 지역경찰·기동대를 단속에 투입하고, 치안파트너와 협력하는 등 총 297명의 최대 가용경력을 활용하여 단속에 나선다.

특히 음주운전 우려가 많은 장소·시간대에 주·야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서별로 주 2-3회 이상 스팟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동시 단속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